

2020 육아정책 심포지엄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육아정책방향Ⅱ

2020. **7. 23.**(목) 14:00~16:0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협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육아정책 방향 II

| 일 시 | 2020. 7. 23(목), 14:00~16:0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일 정 표 |

사회: 김은영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

시간	세부일정
14:00	개회
14:00~14:10	인사말 백선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박진경 사무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제 발표	
14:10~14:35	발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김형모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14:35~15:00	발표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지정 토론	
15:00~15:30	토론 김근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5:30~15:5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0~16:00	폐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병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존의 사회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육아정책의 방향에 관심을 갖고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아지원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 및 아동돌봄 정책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육아정책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총 4회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심포지엄에서 다룬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이어 '아동 돌봄 정책'과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를 기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도입된 제도의 실천과 정착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더 나아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저희 연구소 역시 공보육·교육 이용률 40% 달성,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정책 마련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하여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소 강은진 박사님, 김근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육아정책 개선 방향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자, 뜨거운 여름 쉽 없이 고민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선희 소장님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위한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한 국가가 아동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는 그 국가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아동돌봄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고, 수혜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를 ‘21년 조기 달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19년 말 약 28%).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온종일돌봄체계를 ‘22년까지 20만명을 늘려 53만명의 아동(‘17년 33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수요는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이기에 잠재적인 돌봄수요까지 충족시키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와 비교 시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인 상황입니다(한국 평균 6.57점, OECD 평균 7.6점, '18년).

생애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아동기에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불안정한 삶과 낮은 행복감은 향후 개인 전체 삶, 나아가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육아정책 수립 시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위원회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하고 안전한 사회적 돌봄을 확립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보다 체감도 있는 육아정책 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획기적이며 실제 아동과 부모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안들을 귀담아 들어 4차 기본계획에 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분들과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

Contents

|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주제발표 1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 1

김 형 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 2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 ————— 27

황 옥 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지정토론 | ————— 51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53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59

| 주제발표 1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김 형 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김형모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목 차

.....	서론: 아동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	
.....	본론: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	0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참고문헌	

2

서론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 나타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

3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여건

서론

◇ [저출산]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 필요

○ (삶의 질) 국민 대다수(93%)는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적극 찬성

○ (성 평등) 노동시장 성 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여건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 필요

* 유럽은 여성고용 증가 초기 출산율 하락,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4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서론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5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돌봄정책』의 주요내용

서론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6

4. 기본계획『춤추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주요내용-1

서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지 추가확보, 확충방식 다양화 등

직장어린이집 확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종일 보육 내실화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검토 등

보육품질 향상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확보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질 높은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추진 등

안전한 보육환경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책임을 강화 등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7

4. 기본계획『춤추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주요내용 -2

서론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국공립 확충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19)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유아 학습권 보호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감독 강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
학부모 참여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운영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8

4. 기본계획『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주요내용 -3

서론

◇ 온종일 돌봄: 학교내 돌봄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 가정 내 돌봄 지원: 아이돌봄 전달체계 개편 및 이용 편의 증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돌보미 통합관리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사업체계 전면 개편 추진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신청 대기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운영
사회적 기업, 민간, 지자체 돌봄사업 등 협업 확대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9

4. 기본계획『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주요내용 -4

서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돌봄 여건 확충 및 종합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지역 돌봄 여건 확충

지역단위 양육 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지역 내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지원 보다는 서비스 중심 지원으로 변화유도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 돌봄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10

4. 기본계획『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주요내용 -5

서론

◇아동이 안전한 환경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아동 학대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안전교육 강화

아동 안전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보완

아동안전 사고 예방 교육·홍보 지속 노력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11

본론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2

본론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개관

영유아 보육 사업

아동 돌봄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8) 13

본론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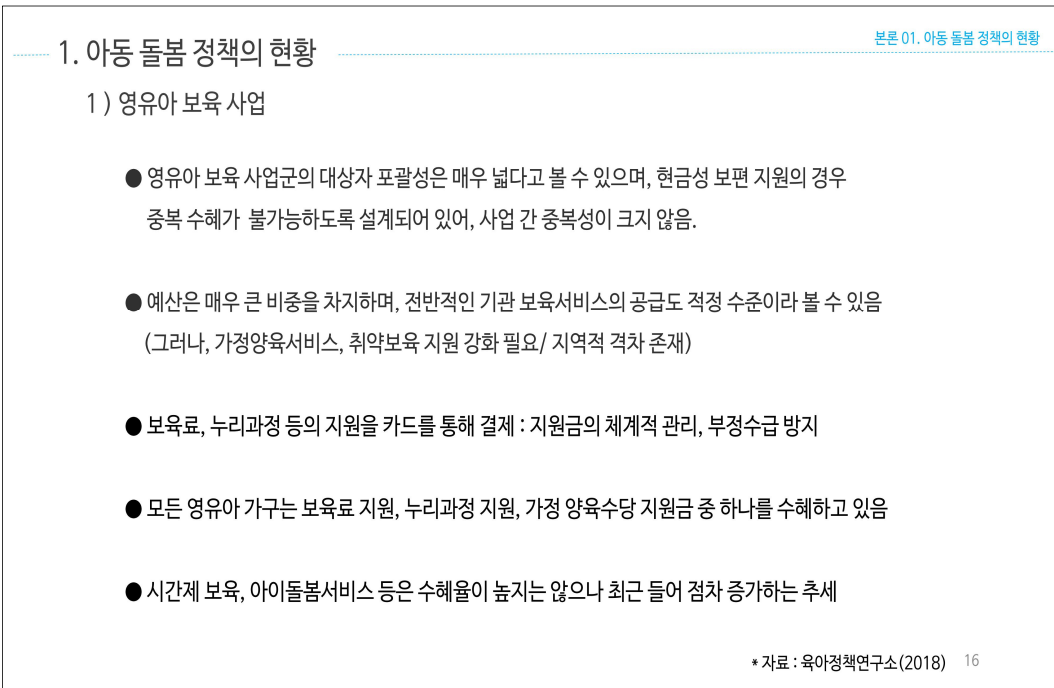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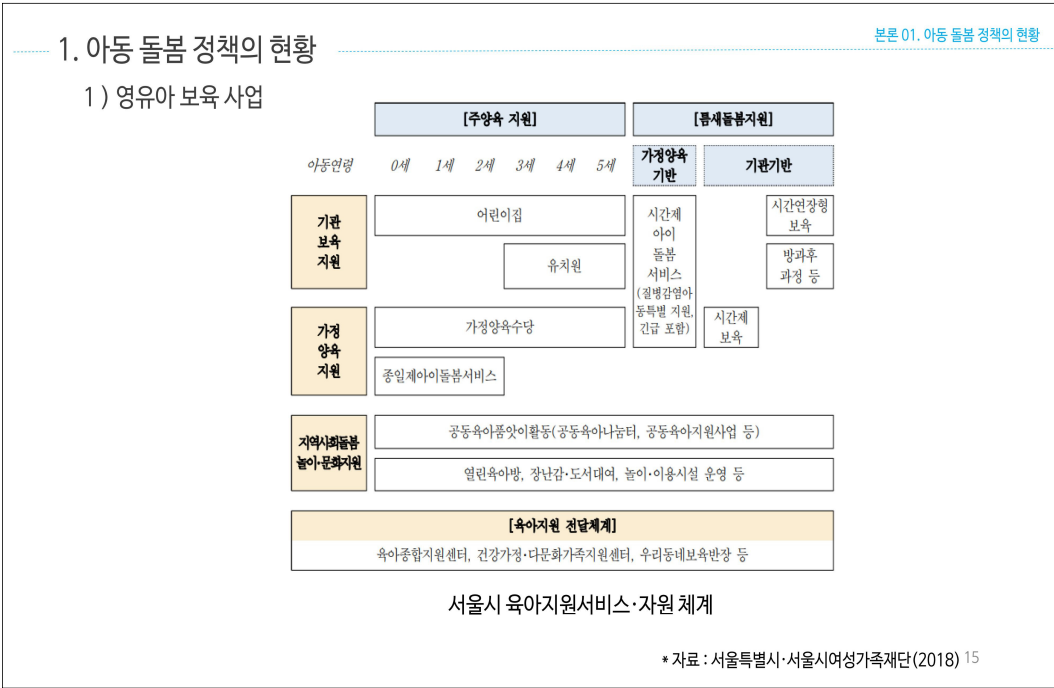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 영유아 보육 사업

영유아 보육 사업

- 보육료 지원사업
 -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
 - 다문화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가정양육수당
- 시간제 보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공동육아 나눔터
- 아이돌봄서비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14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2) 아동 돌봄 사업

아동 돌봄 사업

-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 온종일 돌봄
 - 다함께 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지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본문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17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2) 아동 돌봄 사업

● 방과후학교

·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비전

추진 목표

핵심 과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교육격차 해소

서교육비 경감

운영주체 다양화

연계협력 활성화

1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2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개선

3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4 방과후학교 운영·행·재정 지원강화

방과후학교
협업체계 구축

지역사회

단위학교

유관기관

<출처: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18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2) 아동 돌봄 사업

● 초등돌봄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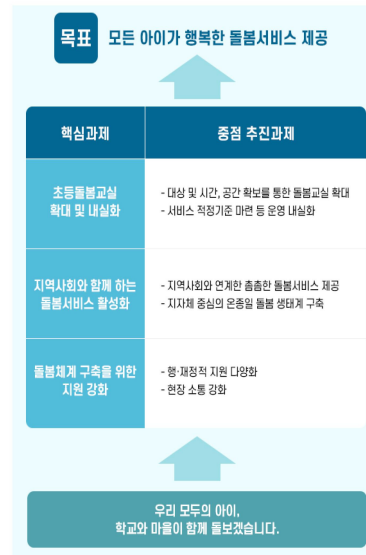
· 초등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

· 추진배경:

핵가족 심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초등대상 방학중,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출처 :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19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2) 아동 돌봄 사업

● 온종일돌봄

·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 추진방향: 초등돌봄 국가책임강화, 지자체 중심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과제: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지역 혁신을 통한 선도모델 구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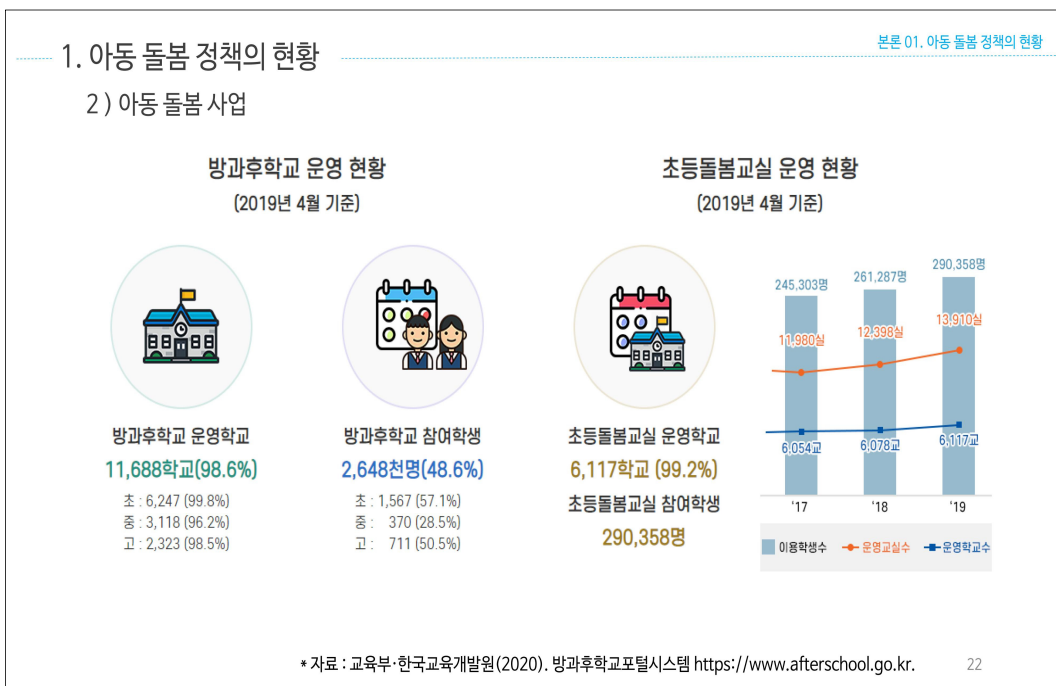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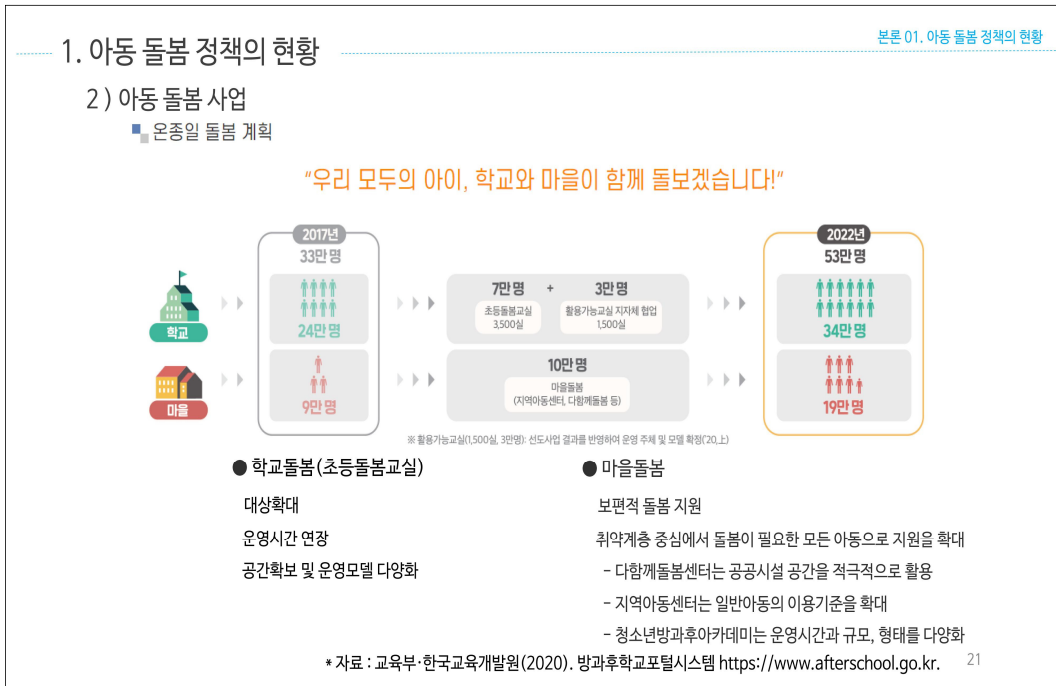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20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보호 필요 아동·청소년 지원

- 학대, 입양, 실종 등 보호필요 아동·청소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 중앙가정위탁센터 운영지원
-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 저소득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등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 청소년 특별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 학교 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가출청소년,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등
- 지역사회청소년보호 통합지원체계 등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WEE 프로젝트 상담지원
- 매체활동능력증진 및 역량해소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가출청소년보호쉼터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문쉼터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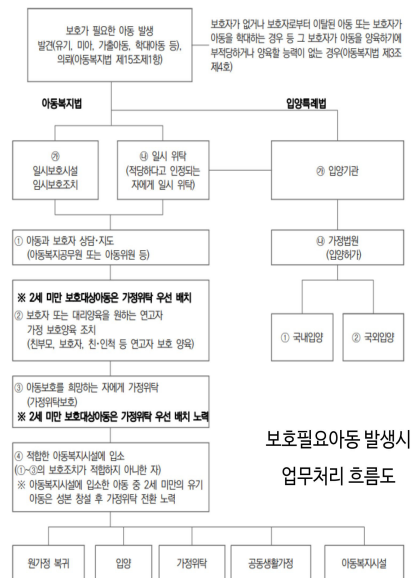
*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3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보호 필요 아동·청소년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결정
 -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양육·자립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악물 및 알콜 중독,
 -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



*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24

본문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방향: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아동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점검방식 개선

· 드림스타트 사업목표

*그림출처: 동해시 홈페이지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5

본문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

*그림출처: 동해시 홈페이지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6

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 학교 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청소년 센터
 -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도모
- 이용대상 : 만 9세 ~ 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청소년 우선)
세부사업 : 복지지원, 교육 및 학습지원, 체험활동, 상담지원, 아웃리치 사업



*그림출처: 한국청소년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사업 안내. 27

본론 0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본론 0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아동 돌봄 정책은 그간 많은 성과를 내었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옴(정선아, 2017; 외 다수).
- 선별 지원의 형태: 돌봄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실수요자(맞벌이, 한부모, 돌봄 취약계층 등)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인 공급 방식을 취함
 - ⇒ 총량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김은정·장수정, 2020)
 - ⇒ 서비스가 필요해도 이용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상당수 존재(김은정·장수정, 2020)

29

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본론 0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맞벌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력 단절(이재희, 2018).
 - 나홀로 아동의 증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7).
 - 조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장수정 외, 2019)
 - 방과 후 방치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봉주·조아라, 2011)
- 최근 연구에서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초등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해 놓은 기준과 공급 수에 수요자들이 경쟁을 거쳐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돌봄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됨(장수정 외, 2019; 장수정, 2020)
- 소득에 따른 돌봄 유형의 계층화·양극화 가능성 초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43.1%)과 조부모 등 친인척을 통한 돌봄 비율(35.4%) 등 사적 돌봄 자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

30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31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
- ▶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기관의 경우, 질 관리 규제 강화
- ▶ 돌봄기관·시설에 종사하는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 ▶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방안
- ▶ 가족돌봄노동에 대한 현금지원서비스 축소
- ▶ 충분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 이용자들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료 분담 등으로 돌봄 정책 재정의 안정화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32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돌봄 정책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동임을 인식해야 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아동의 권익보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
- 돌봄서비스 돌봄인력의 처우개선,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은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포괄하여 폭이 넓음
다양한 발달 단계의 아동·청소년이 포함됨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함

* 자료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33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의 연구에서 공적 돌봄 미이용자의 약 63%는 잠재수요자
김은정·장수정(2020)의 연구에서 학교 돌봄 미이용자의 44.3%, 지역사회 돌봄 미이용자의 약 63.0%는 잠재수요자
⇒ 미이용자의 잠재수요가 높음. 따라서 돌봄서비스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기본적 서비스로서 보편적 서비스 공급구조로 전환
⇒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확대
⇒ 지역주민의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
⇒ 지역사회 내의 공간(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내 주민 공간, 학교 등) 활용하여 접근성 향상
⇒ 지역사회 돌봄도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상호 연계를 강화
⇒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자료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김은정·장수정(2020) 34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방과후 돌봄의 핵심 목적은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임
아동이 안전하도록 돌봄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함
돌봄 시설 내부 환경의 안전 이외에 돌봄 시설의 주변 환경, 돌봄 시설과 집 또는 학교와의 안전한 이동,
돌봄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 시 안전 문제, 식사나 간식의 안전 등 까지 광범위하게 정의 되어야 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하여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기관별로 법적 근거가 달라 기준이나 서비스 목적 내용이 다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핵심기본요건, 충족요건, 선택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35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Continuous Community Care System: CCCS) 구축

- 영유아기(0-6세):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동기(7-12세):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청소년기(13-18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CYS-Net)

36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영유아기(0-6세)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20만원(12개월 미만), 월 15만원(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월 10만원(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지원
-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5세 아동에게 지원

37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영유아기(0-6세)

- 유아학비 지원(교육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월 60,000원(국공립 유치원), 월 220,000원(사립 유치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38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아동기(7-12세)

- 방과후학교(교육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별도로 마련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임. 본래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도입했고, 2016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을 3-6학년까지 확대함. 오후돌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저녁돌봄은 저녁을 먹은 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39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아동기(7-12세)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이용료는 무료.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원칙. 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이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 및 서비스의 연계)를 실시

40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아동기(7-12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과 결과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함.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사업학교로 이어지는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필수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사업이 있음

41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 청소년기(13-18세)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이고, 지원기준은 저소득층(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이상 가정 등. 지원내용은 지역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체험활동, 기초학습, 급식,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운영 등. 운영시간은 방과후 - 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CYS-Net):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Community Youth Service Net). 지원대상: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42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1. 기능 조정

● 각 시설의 대상 연령 구분

지역아동센터: 0-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다함께돌봄센터: 7-12세(초등학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3-18세(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이에 연령별로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추진

● 실행방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인근 지역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도록 권고

시군구의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 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실행

43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2. 드림스타트: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 수행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내용: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 및 관리함

44

2. 드림스타트: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 수행

● 운영방식

- 지역사회 아동의 게이트웨이는 드림스타트로 하고,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가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자원연계, 정보공유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드림스타트의 대상을
빈곤 및 취약 계층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필요 아동 등으로 확대함

45

2. 드림스타트: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드림스타트가 **지역사회의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총괄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 분야의 전달체계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드림스타트가 **모든 유형의 위기아동의 보호조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아동 분야의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46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은정·장수정(2020). 초등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분석: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67(2), 31-59.
-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7). *서울가족보고서*.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가족특성화과제 연구보고서: 서울지역 돌봄 정책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8).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사업 안내.
- 육아정책연구소(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 이봉주·조아라(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7-33.
- 이재희(2018).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슈페이퍼* 2018-02. 육아정책연구소.
- 장수정·송다영·백경훈(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비판사회정책* 62(2), 241-273.
- 장수정(2020).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돌봄 민주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1), 125-15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 [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 정선아(2017).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돌봄'과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어린이교육비평* 7(2), 39-5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수요 분석 연구*.

47

참고문헌

참고문헌

- 동해시청 홈페이지. <http://www.dh.go.kr/pages/index.htm>.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http://jikimi.or.kr>.

48

| 주제발표 2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

황 옥 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2020.07.23

2020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부의 가정내 양육지원, 저 출생에 대한 정책 효과는?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발표 내용

- 겉도는 저출산 정책, 짚어 보기
-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 2020 출생 현황
- 왜 실패하고 있는가?
- 가정내 양육지원, 이렇게 하면?
- 저출생 되돌리기 가능할까?
- 지금, 저출산 정책 기조에서 기억해야 할 것

• 참고문헌

걸도는 저출산 정책 짚어 보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하기까지..

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2006 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대폭 참여하여 5년간('06~'10)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06.8)

2008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 위원회 출범('08.4)

:

2012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편입

:

2017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민간위원 확대

2018. 7. 패러다임 전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018. 12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기치 하에 3차 기본계획 재정부

걸도는 저출산 정책 짚어 보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요약본]

새로
마지
출판 2010

2006. 7

관계부처 합동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새로
마지
출판 2015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요약본)



2006. 7

관계부처 합동

- 명명 : 새로마지 플랜
출생에서 사망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한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
-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 증진
- 원인
 - 가치관 변화/결혼 자녀관 변화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 소득고용불안정
 - 일 가정 양립 곤란
 - 자녀양육 부담 증가
 -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체계 부족
 - 육아 인프라 부족
- **4대 분야 237개** 세부 사업
- **총 투자 비용 42.2조원 투입** (출처: 2차계획 14쪽)
(국비, 지방비, 기금 등 포함, 당초 40.3조원의 104.7% 투입)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요약본)



200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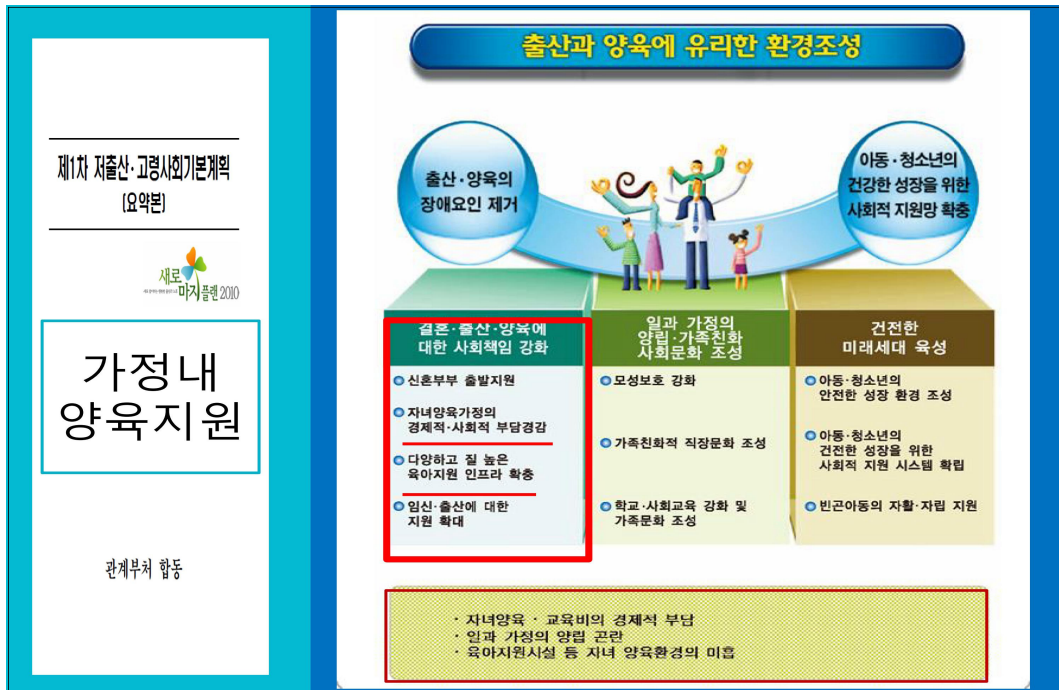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

- 출생아 수 추계
 - '05 438
 - '10 434
 - **'20 377**
 - '30 348
 - '50 226 (단위 : 천명)

합계출산율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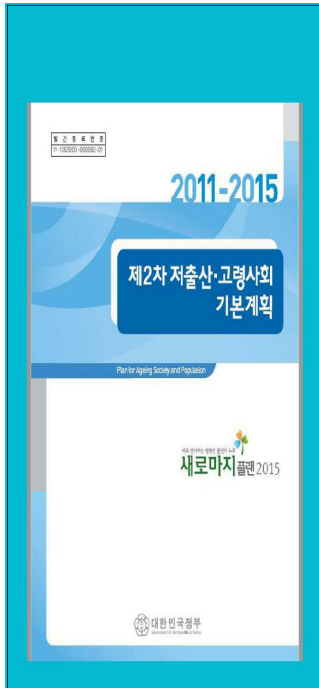
- 1.00 : 합계출산율이 '35년까지 1.00으로 하락 후 유지
- 1.08 : 합계출산율이 '05년 수준(1.08)으로 유지
- 1.4-1.6 : 합계출산율이 '10년 1.4, '15년 1.6으로 회복 후 유지
- 1.4-1.6-1.8 : 합계출산율이 '10년 1.4, '15년 1.6, '20년 1.8로 회복 후 유지

1.6은 OECD 평균수준, 1.8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고출산국가에 해당하는 북유럽국가 수준



- **목표**
 - 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2016~30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
- 4대 분야 231개 세부 과제 추진
- 제2차 계획기간('11 ~ '15)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95개 과제
 -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 합계출산율 가정

합계출산율 가정

- 1.15 : 합계출산율이 '09년 수준으로 유지
- 1.35 : 합계출산율이 '15년 1.35로 회복 후 유지
- 1.35~1.7 : 합계출산율이 '15년 1.35, '20년 1.7로 회복 후 유지
- 1.7은 OECD 평균수준, 1.35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수준

(출처: 2차 기본계획 36쪽)

• 합계출산율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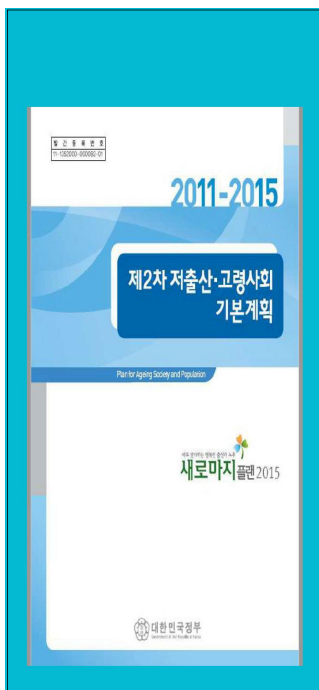
'10년 1.15

'15년 1.17

'20년 1.20

'30년 1.28

(출처: 2차 기본계획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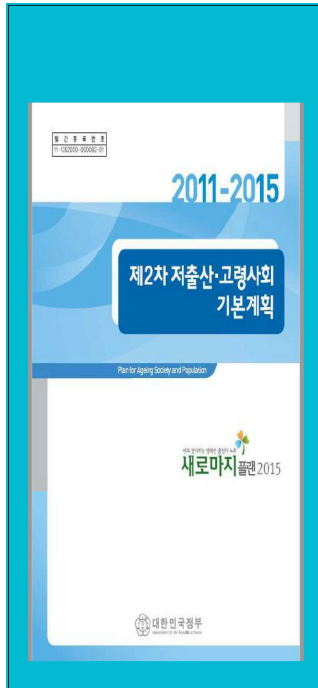
-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1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20~39세)의 가장 주된 출산중단 이유>

		소득/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불임 등 기타
2005	전체	18.5%	9.9%	18.0%	9.1%	19.7%	24.8%
	취업	24.4%	7.6%	13.4%	11.8%	21.8%	21.0%
	미취업	14.1%	11.5%	21.8%	7.1%	17.9%	27.6%
2009	전체	18.6%	16.7%	26.7%	6.0%	15.0%	16.9%
	취업	20.0%	8.6%	22.9%	14.3%	21.9%	12.4%
	미취업	17.7%	20.8%	28.6%	2.2%	12.1%	19.0%

※ 자료: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보사연 '09)

- 그런데, '가치관 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는?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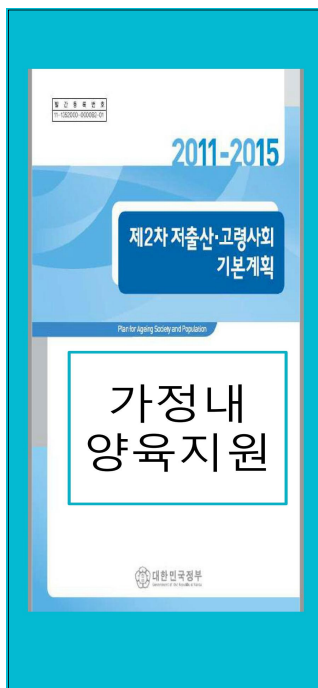
-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1차 기본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

<3대 방향>

1. 일-가정 양립 확산,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추진

-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활동 내실화, 진로활성화 등등

• '가치관 변화'와 관련한 정책의 부재 확인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조성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국토 국방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복지 복지
	재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 다자녀가장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복지,교과 행안 기재,국토,교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복지 복지 복지 여성가족 복지,교과,여성가족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 방향 선회
 - ⇒ 출산이라는 주관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 강요
지적에 따른 관점의 전환
 - ⇒ 그러나, ‘삶의 질’과 ‘출산의지’를 별개 사안으로
오히려 개인 **삶의 질과 출산을 분리하는** 정책이 아닌가?
 - ⇒ 이 두 개념의 화학적 조화가 가능한 정책이어야...

- 출산과 삶의 질의 연계를 모색하여 결혼과 출산
이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어야 할 것임.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III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목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추진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비율</td> <td>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td> </tr> <tr> <td>시간</td> <td>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td> </tr> <tr> <td>돌봄</td> <td>충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td> </tr> <tr> <td>문화</td> <td>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td> </tr> <tr> <td>기반</td> <td>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임·주거·교육) 조성</td> </tr> </table>	비율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충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임·주거·교육) 조성
	비율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충족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임·주거·교육) 조성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소득</td> <td>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td> </tr> <tr> <td>준비</td> <td>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td> </tr> <tr> <td>참여</td> <td>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td> </tr> <tr> <td>건강</td> <td>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td> </tr> <tr> <td>마무리</td> <td>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td> </tr> </table>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인구변화 적극 대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사회시스템</td> <td>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td> </tr> <tr> <td>지역</td> <td>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td> </tr> </table>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지역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지역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거버넌스</td> <td>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td> </tr> <tr> <td>서비스/재정</td> <td>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td> </tr> </table>	거버넌스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거버넌스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삶의 변화 모습

1 단계

-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
- 행복한 노후 준비 여건 조성
- 인구 변화 적극 대비 분야별 대책 마련

3차 계획 (~2020)

2 단계

- 2040·은퇴세대가 미래희망을 가지고, 안정되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환경 조성
-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4차 계획 (2021~2025)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돌봄)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

영유아	민간 위주 양적 확충 (공보육 이용 비중 35%)	보육 품질 향상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보육교사의 추가 확보, 만일보육에 배치) 공공성 강화 (공보육 이용 비중 40%)	
초·중	지역사회 돌봄 학교돌봄	다함께 돌봄 등 (10만명 확대) 초등돌봄교실 (110만명 확대)	시간지대 해소
가정	아이돌봄 아이돌봄	아이돌봄 확충 (2배 증가) / 질적제고	민간돌봄 자격관리 (국가자격제)
지역 맞춤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지역맞춤 돌봄 등 서비스 위주 지원 유도 지자체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지수 개발·공개	
현행 1단계 2단계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제고
 * 공보육 이용 비중 40% 조기 달성('22→'2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

○(가정) 아이돌봄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육아를 위한 캠페인 실시

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남성 육아참여 확대 * 육아휴직 남성 사용 비중 13→20% 내외 일·생활 균형 정착 *남녀 모두 당연히 사용하는 권리 확립
	현행	1단계	2단계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 확대 등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황과 연계

- 3년('16~'18)간 116.75조원 예산 투입
 - 1차 기본계획('06~'10) 42.2조→ 2차('11~'15) 109.9조→ 3차('16~'20, 계획) 197.5조

저출산·고령화 정책 투입 예산 (단위:조원)

연도	예산 (조원)
2006~2010년	42.2
2011~2015년	109.9
2016~2018년	116.8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상반기 출생 현황 ...

chosun.com 사회

1월 출생아 3만명 아래로... 올해부터 한국 인구 준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6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내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0145.html

≡ 한국경제

268兆 퍼부었지만...저출산 더 심해졌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예고된 실패**

예산 60%를 연금·무상보육 '퍼주기'
정치권, 정년 연장 등 대응책 전환

한겨레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기록...올해부터 '인구절벽'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990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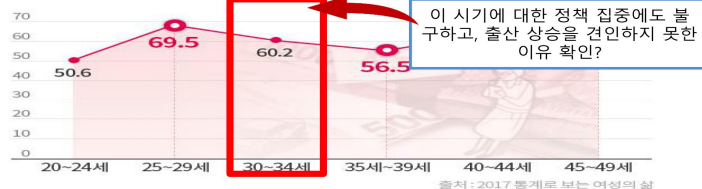
0.92명 2019년 합계 출산율, 전년대비 0.06명 감소,
총 30만3100명 출생

0.90명 2020년 1분기 합계 **출산율**

간과한 것은 ...

- 가임 인구층 대상의 출산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는가?
 - 비취업/취업 여성의 출산의사 확인?
 - 출산의사가 없는 인구층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여성취업과 출산의 상관을 확인하였는가?
 - 취업과 출산 육아 정책 연계 시 출산의사를 확인하였는가?

⇒ '예'라고 하더라도 이 인구층이 기여할 출산율 증가 폭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 흔히 M-Curve 로 불리는 여성의 경력단절 통계를 보는 출산에 대한 가정과 희망 섞인 기대의 오류



간과한 것은 ...

- 경력단절의 다른 사유는 없는가?
 - 육아,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외의 다른 사유는?
 - 조사 결과의 활용 오류를 유도하지 않는지?
- 저출산 원인탐색이 제대로 되었는가?
 - 저출산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의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는가?
 - BBC 인터뷰 내용과 같은 조사 결과가 왜 부재한가?
- 즉각적인 정책 효과 기대로 인하여 현상에 대한 분석의 소홀함은 없었는가?
- '용어'에 내포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습효과 우려
 - 우리 : '부담'
 - 서구 : '가족 확대'
- 출산과 여성경제활동의 부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였는가? 산업과 경제흐름, 사회구조의 변화 등의 변인 고려

왜 실패하고 있는가?

• 출산 가능 인구의 가치관 변화 추이 추적과 반응 실패

보건사회 연구원(2016)

- 중고등학생
- 2명 중 1명(52.6%) 결혼하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런 문제없음
- 10명 중 6명(63.7%) 공부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음

김지예 씨(BBC 인터뷰)

"아이를 갖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 성화에 한 아이 출산했지만, 정부지원금은 자신의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출산 가능 인구의 욕구 파악 실패

Freedman(1995)

-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이유 탐색,
- 개인주의 가치관, 소비활동의 증가

BBC <https://www.bbc.com/korean/news-51195531>

출산을 감소는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런 추세는 교육과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으로 퍼져 나갔다.

"아이를 낳게 되면 몸의 변화가 두렵다"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걱정"

왜 실패하고 있는가?

• 출산 가능 인구의 출산 시 사회구조 변화 예측 실패

- 고용(기회/ 안정성) 환경
- 근로 환경
- 가족 문화 등

• 정책의 선택과 집중 실패

비용투입의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가능/불가능, 원인 그룹핑 → 근거한 정책 등

⇒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보편성 추구 정책이 개인의 출산 억제 요인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왜 실패하고 있는가?

• 비용지원 효과 예측 실패

- 뜨거운 교육열: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확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 교육비 절감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한 명의 자녀에게 두 세명 자녀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현상을 야기 함(자경옥, 2005)

- 기대 양육비용과 실제 출산 행태 사이에는 매우 약한 연관성만이 확인 됨(문성혁, 2016)
- 사교육비

⇒ 정부 지원금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들...

▷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함

• 여성 노동시장 확보와 출산 연계 정책의 취약

-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인위적 조치들(?)
- 여성 노동복귀 정책에 초점

• '삶의 질'과 출산자녀양육의 연계 실패

- 개인 삶의 질과 가족생활을 분리하는 삶의 질 모색



- 역설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삶 분리 강화,
- 저출산 가속 기여

왜 실패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서구 정책 따라하기?

현금지급과 복지 확대의 두 축의 접근

-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제한된 시각과 이해
 - 여성관점 부각 / 육아와 개인의 삶의 질 분리 / 노동 시장의 현실 반영
-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물입/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의거 사회적 설득력을 획득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따른 각 사회서비스 인프라 질에 대한 비판 등장
 - 사회서비스 등 질적 우수성 도모에 예산 투입 요구, 각 사회 서비스 질 도모 주장에 정책 오류 확인 및 획기적 정책 전환 모색 정체/매몰..
- 정책 개선은 사회서비스 등 세부 사업 종류의 확대로 이어지고, 각 관련 기관의 단위 사업 개수 증가로 예산 분절, 예산 소진

그러나,

최근 보고들은 두 축은 저출산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확인....

개인의 삶의 질, 이 모호함과 포괄성은 출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유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척 외면?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 지원 레토릭

가정내 양육지원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의 한 기제로...

정부의 '제 1,2,3 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기반 시행

	1차(2005~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아동 수당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확대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돌봄 서비스	-돌보미 서비스 확대 -동네 품앗이 육아방 운영	-이웃 간 돌봄 나눔 사업 확대 ☞ 돌보미 사업 법 제화	☞ 지역 사회 내 돌봄 인프라 확장(공동육아) ☞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 시장 관리
돌봄 교육 제공		☞ 돌봄 인력 자격 기준 관리 ☞ 돌봄 인력 교육 지원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가정내 양육지원

여러 사회서비스 방식 개발?

- 선택 다양성 그러나 정책효과는? 왜 그럴까?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 세부적으로, 시간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며 종일제 이용자는 최근 줄어 드는 추세
- **육아종합서비스**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
- **가정양육 수당**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 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시간제보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
- **공동육아 나눔터**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 아이 돌봄 사업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17,208	17,553	19,377	20,878	23,675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개소)

계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민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자활센터	기타
222	135	25	13	10	10	4	21

양성교육기관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개소)

계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민력 새로알아가센터	YWCA/YMCA	기타
47	6	6	2	24	5

※ 기타: 대학교, 산학협력단(3), 평생교육원(1), 사립보육재단(1)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 아이 돌봄 사업

양성교육기관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개소)						
계	건강다다 통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 새로일하기센터	YWCA/YMCA	기타
47	6	6	2	24	4	5

※ 기타: 대학교 사학협동단(2), 평생교육원(1), 사립복지재단(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 세부적으로, 시간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며 종일제 이용자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 부모 및 가족과 아동의 분리를 촉진하는 육아지원이 아닌가..

=> 육아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기여 할 수 있을까?

“전주시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이 전국 행정 부문 전국적인 모범사례 시킨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사례 평가”

“자녀 돌봄 품앗이”

• 기대와 욕구에 미달

- 아이돌봄 서비스에 내재한 위험 해소 어려움
- 가정 양육 수당의 동결
- 공동 육아방
- 놀이 영상 시청
- 놀이 꾸러미

⇒ 제공/공급 위주 육아지원

⇒ 피로감?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지원 레토릭

- 영유아기 초점, 아동기 이후의 양육지원 미흡
 - 아동수당의 7~18세 미만 확대 주장
 - 출산 전 후 여성 지원 취약
 - 산전후 우울
 - 의료, 건강 지원체계
 - 개별 요구 충분성 미흡
 - 서구의 경우 방문/개별/맞춤 지원
 - 가정과 기관 이용의 조화? 탈 가정 가속화?
 - 아파트 내 '공동육아시설' 설치
 -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밖으로 밖으로....
 - 이용과 운영 기준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는가?
- => 탈 가정 가속화??
=> 이 세대의 가족 가치는???
- 가족 문화/유지와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는가?

저출생, 되돌리기 가능할까?



Poster used to advertise the new family allowance - 1945. The National Archives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영국

- 2018년 통계집계 이후 출산율 최저치 기록
- 20세기 초 세계전쟁과 경제위기로 출산율 급감
 - 당시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감
 - [The Maternity and Child Welfare Act of 1918](#)
 - 이 법이 근간이 되어 각 종의 보건의료 지원 시작
 - 아동수당, 가족 수당 등 아동복지 개편 확대
 - 동시에 밝혀지지 않은 저출산 원인을 찾고자 정부가 온갖 노력을 기울임
- ["The Reluctant Stork"](#)(1937)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가?'
 - 결과) 재정문제, 지지 부족, 주거, 사회안정

- 2019년 100년 전과 똑같은 저출산 위기에 봉착

⇒ "이것은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이지만, **육아외 가족에대한 사회적, 재정적 가치**를 다시 부여함으로 **써만 해결할 수 있는 위기이다.**"

출처: <https://theconversation.com/its-a-national-crisis-uks-birth-rate-is-falling-dramatically-121399>



- 아이를 낳을지 여부는 여성의 삶의 방식, 행복과 존엄에 관한 핵심적인 결정이다. 이는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그 결정을 정부가 여성을 대신한다면 이는 여성을 스스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1993년 대법관 지명 의회 청문회에서)
-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여성의 관심사가 늘수록...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솔직히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은 왜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까?"라고 묻는다고 했다.(리슨 박사, 옥스포드 대학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등과 같은 재정 지원은 경제변동과 물가 상승율, 고용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한다 (Ritva Nätkin, a lecturer in social sciences at Tampere University.)
출처:<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191017-does-it-make-sense-to-pay-people-to-have-kids>

- 핀란드 작은 마을 Lestijärvi
 - 출산율 저하로 10년간 1만유로 지급
 - 2018년 1.4명
 - 2008년 1.85명
 - 이 규정 시행 이후 60명의 아동 출생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 에스토니아 현금지급 확대

“세번째 베이비 붐”

- 1.32 2000년대 초
- 1.67 2018

- Allan Puur, a professor of demography at Tallinn University,

“

현금 지급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출산율은 대개의 경우 비 주기적이라서 경제상황이 좋을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 이탈리아 북부

“출처: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191017-does-it-make-sense-to-pay-people-to-have-kids>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 Laurent Toulemon, senior researcher at the French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

“프랑스 출산율 견인이 반드시 재정지원책 때문은 아니다. 프랑스는 무자녀나 외동이 가족에 반대되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강력하고도 긍정적 인식 등 재정지원 외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크다.”

- 프랑스 안정적인 출산율 유지
 - 출산친화 정책/가족친화정책
 - 다양한 종류의 혜택과 수당
- 출생률의 의미있는 증가는 사회적 태도, 친가족 정책 및 재정지원의 복잡한 조합에 의한 결과임

“출처: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191017-does-it-make-sense-to-pay-people-to-have-kids>

Prof Gauthier

- UN 보고.
유럽국가의 2/3
저출산 현상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118616> 2020.1.15일자

"스칸디나비아조차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더 높은 출생률을 유도하는 열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우리는 작년에 생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까지 그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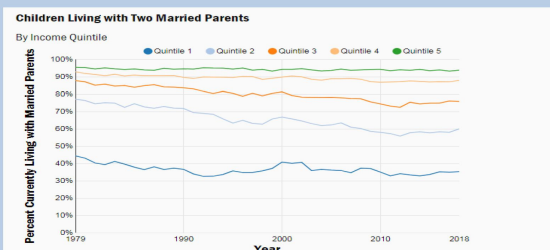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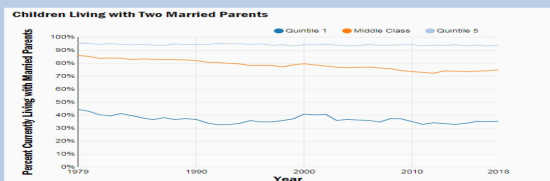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118616>
2020.1.15일자

Richard V.Reeves
and
Christopher Pulliam

Wednesday, March 11, 2020

중산층의 결혼과 두 자녀 출산율의 하락

<https://www.brookings.edu/research/middle-class-marriage-is-declining-and-likely-deepening-inequality/2020.3.11>



더욱이 우리사회의 사정은 다르다....

- 사교육을 접기 어려운 우리 현실
- '가족'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다룬 사회분위기
- 보호/의존사이에서 자조와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분담을 배우기 어려운 성장 환경
 - ⇒ 부부와 부모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 ⇒ 공동과 개인 책임 경험 부족
- 비양육친화사회
 - 여성근로 환경
 - 사회전반 분위기
-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 자유 등'을 상호배타적 개념으로 본 인식의 지배.....
- 아동기 '놀이'와 '여가'의 결핍이 오래도록 '삶의 질'과 '자기 만족'에 개인적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 아동기 경험

저출생, 되돌리기 가능할까?

최근 연구보고물에 눈을 돌리면....

“이것은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이지만, **육아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재정적 가치**를 다시 부여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위기이다.”

- “중산층의 결혼과 출산 감소의 세계적 추세”
-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우리는 작년에 생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까지 그것이 맞았다 고 생각했다.”

▶ 육아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에 방점을 둔다면....

그래서,

가정내
양육지원을
이렇게 하면...

가정내 양육지원 관점

- 개인 요구/ 필요 관점
 - 시간
 - 공간
 - 자원
 - 정신신체건강 지지
- 개인 역량 발달/ 지원 관점
 - 역할
 - 책임
 - 특수상황(위기/ 기회 모두 포괄)
- 정보 제공 관점
 - 의사결정 지원
 - 자원활용안내
- 지역기반 관점
 - 자원 개발
 - 자원 활용

사
재
회
정
적
적
가
가
치
치
관
관
점
점

지금,

저출산
정책 기조에서
기억해야
할 것...

- 양육지원 정책은 정치의 영향과 사회적 관심사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하나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음.
- 정책에서 정치를 분리하기란 어려우며 더 냉소적인 이들은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나 언론의 반응 등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된다고 주장하기도 함.
-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확고한 수립은 정치와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각종의 비용지원 체계의 효율화 모색
- 국가책임과 부모 책임의 조화와 균형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인 정책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
 - 좀 더 집중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정책
- 양육지원 정책의 시의성 있는 의제 포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와 행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영국의 Place 2 Be)

지금, 저출산 정책 기조에서 기억해야 할 것...

- 나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 국가 책임과 부모책임 균형과 조화
 - 국가와 부모의 책임의 명확한 한계로 부모 책임을 약화하지 않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서로 돕는 사회
- 인구재생산 의미/ 현세 욕구와 계승
- 인구 재생산 다각화
- 가족 확대의 가치를 새기는 전 사회적인 가족문화 창출 움직임 만들기.
- 육아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재고 모색

개인주의에 대한 일부의 왜곡 이해 극복
개인주의와 가족 공동체를 분리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개인주의는 공동체주의 안에서 발현될 수 있으며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발달해 나가도록 함

저출산 정책기조가 분명하다면 다양한 서비스 유형의 찾기와 실행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 시도해 볼만한 가정내 육아지원 예
 - 전 사회적인 가족문화 창출 무브먼트
 - 자녀 연령에 따른
이용가능한 육아지원 내용 확인해 주기
 - 시간과 장소의 공유와 분리 프로그램
 - 육아 응급상황 지원 체계 구축
 - 대체 육아지원 체계 구축
 - 육아지원 인력망 구축
 - 기본 육아서 발간 배포
 - 임신과 출산 공포 이기기
 - 영유아기 자녀양육 역량 키우기
 - 지역사회 육아지원 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이용
(희망 시간 대 어린이집 이용)
 - 특수한 요구를 가진 육아지원 전문가 지원
 - 영아 육아 동아리 지자체 단위 운영

참고문헌

- 황옥경(2019) 양육지원 정책: 수사와 정책적 접근의 변화 필요성.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포럼 발제문
- Churchill, H.(2011).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Policy Press.
-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118616> 2020.1.15일자
- 출처:<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191017-does-it-make-sense-to-pay-people-to-have-kids>
- <https://theconversation.com/its-a-national-crisis-uks-birth-rate-is-falling-dramatically-121399> 2019.08.14일자 'It's a national crisis': UK's birth rate is falling dramatically

A photograph of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red headscarf, holding a young child who is crying. The child is wearing a green jacket. The background is blurred, suggesting an indoor setting.

감사합니다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okhwang@stu.ac.kr

| 지정토론 |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토론문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토론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토론문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Part 1

저출산 정책의 전환

1.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
2. 성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
3. 이를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4.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돌봄 체계 확대
5. 질적 수준 제고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 위주 지원 유도

Part 1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1. 영유아 보육 사업
2. 아동 돌봄 사업(초등돌봄)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Part 2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1. 영아(0-2세) 보육은 어린이집(복지부 관할)에서 모두 담당
2. 유아(3-5세) 보육 및 교육은 어린이집(복지부 관할)과 유치원(교육부 관할)으로 분리해서 담당
3. 동일한 연령의 아동(3-5세)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이 적용되었으나 기관 및 관할부처의 차이로 인한 유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4.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유보통합 등의 문제도 보육과 교육의 분리에 의해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속됨

Part 3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1. 초등돌봄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
 - 초등돌봄교실은 근거법령 미비
 2.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①8. 지역아동센터
 3.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 근거 법령의 차이 및 미비는 돌봄 서비스 기준의 표준화 저해

Part 3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1. 초등돌봄교실의 근거 규정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5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교원들의 반발로 추진 중단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박경미 의원 안(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권철승 의원 안(21대 국회): 계류 중
2. 초등돌봄교실 근거법 마련의 어려움
 - 교육과 돌봄의 분리(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돌봄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인식)
 -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의 책임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반발
 - 초등 1·2학년 공적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Part 3

초등돌봄 종사자 지위

1.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 자격요건: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
 - 지자체 교실활용 / 지역사회 민간위탁 도입
2.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 포함 여부 논란
3.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2016 유은혜 의원 발의)
 - 교육공무직원: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정규직 교원과 돌봄 종사자의 입장 차이
5. 초등돌봄 종사자 지위의 불안정은 돌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침

Part 3

초등돌봄 보편적 지원 확대

1. 초등돌봄 서비스의 이용자격

-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으로 등록
- 다함께돌봄센터: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소득수준과 무관)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저소득, 한부모 등)를 정할 수 있음

2. 초등돌봄 보편적 지원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문제 발생
-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통합 모색(이 경우 기존의 돌봄취약아동을 위한 돌봄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발생)

Part 4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1.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교육과정은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2.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중 및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포함

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의2)

4.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국가자격제도 도입 문제)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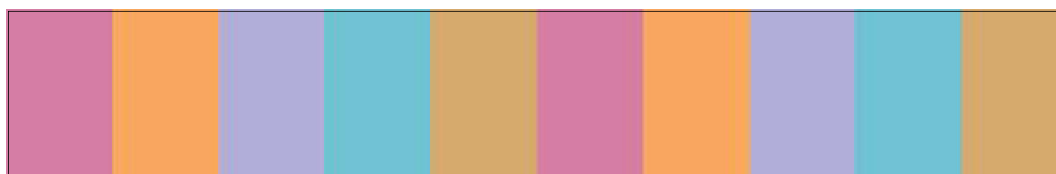
아동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

1. 요보호 아동·청소년 사업 부문(학대, 입양, 실종 등) 예산, 지원 인력, 이용자수, 시설 공급에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설치 및 운영은 계속 증가 추세였음
2. 그럼에도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격리보호를 받더라도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재학대를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정토론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강은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범위와 대상의 문제

[가정 내 양육 지원]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2016)

○ 협의: 기관 미이용 양육

- 양육수당 대상

○ 광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전반 포괄

- 기관이용 가구 포함. 기관 이용 비용 지원 대상

- 가정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내 양육 역량 강화

2.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변화



3. 20~49세 여성에게 출산, 무엇이 불안한가?

○ 출산에 대한 불안감

-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은 공존할 수 없다
- 출산으로 나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없다
- 나의 미래도 불안하다
- 낳더라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비용, 서비스, 인프라 정책이

이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는가?

○ 아니면, 첫 아이의 출산과 양육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었는가?

4. 여성 학력 및 취업 상태와 함께 출산율

○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기간 합계 출산율(신윤정, 2020에서 재인용)

연도	전체	학력 수준		취업 상태	
		고등학교이하	대학이상	비취업	취업
2012	1.30	1.56	1.28	2.17	0.73
2015	1.24	1.42	1.23	1.93	0.79
2017	1.05	1.08	1.07	1.50	0.71

- 학력수준별 합계 출산율 거의 유사, 취업 상태별 합계출산율 격차 감소

○ 한국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의 하락율 보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 차지. 취약계층의 출산 양육 장애 요인 해소 필요(신윤정, 2020)

* 유럽 국가에서 고학력 집단의 출산율 높고, 같은 학력 수준에서도 노동 시장 안정성에 따라 출산율 다름

5.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 지역의 일자리 감소,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이동
- 육아를 위한 환경의 격차는 극대화
- 취약 계층의 빈곤화로 가정 양육의 위험도 증가



가정 내 양육지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접근 필요

6.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장애를 없애주는 정책

- 육아에 가치를 부여하며 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 * 육아문화개선, 육아친화마을 조성 등
- 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서비스 인프라
 - * 핵심 정책(보육교육/돌봄, 보건의료,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등)을
모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 취약 가구에 대한 비용, 서비스 등 집중 지원
 - * 다부처 협력을 통해, 주거+보호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감사합니다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memo

memo



2020 육아정책 심포지엄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육아정책방향Ⅱ